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관련 기사 12면

세계 난민의 날,
엇갈린 난민들의
운명

2면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3면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 갈등,
한국은 어디로?

4~5면

레닌주의는 무엇인가?
— 오늘날의 의미

6~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9면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원하청 구조의 문제

10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12면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글 김어진·사진 조승진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된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옥죄고, 없는 존재 취급해 왔다. 반면, 난민과 어울려 살아가며 든든한 이웃이 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난민 루렌도 가족과 그들에게 연대해 온 한국인들이 마침 주말이던 이번 난민의 날에 함께 놀이공원 나들이에 나섰다. 따뜻한 우애를 나누는 시간을 동행 취재했다.

6월 20일, 양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에 나섰다. 루렌도 가족과 연대하며 오래 우정을 쌓아 온 한국인들과 그 자녀가 동행했다. 이들은 루렌도 자녀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2018년 12월 말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했다.

2019년 10월 루렌도 가족은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와 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공항 억류 생활에서 벗어나 한국 땅에 정착했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이주민을 지원하는 안산시 글로벌청 소년센터와

여러 활동가의 도움으로 월세집을 구해 한국살이를 이어 가고 있다.

루렌도 가족은 지역의 난민 이주민들과도 이웃이 됐다. 자녀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들은 집 인근 한 초등학교에 4학년(레마 11세), 3학년(쌍둥이 로데와 실로, 10세), 2학년(그라시아, 7세)으로 재학 중이다.

루렌도 씨는 집 근처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란 빠듯하기만 하다. 둘째 로데가 핸드폰 애기를 꺼내자 '너희들 통신비까지 감당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친다. 루렌도 가족은 빠듯한 생활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올해 4월 문재인 정부는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다. 루렌도·보베테 씨는 6월 23일로 예정된 이의신청 면접 심사 얘기가 나오자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루렌도 부부의 네 자녀는 난민 심사 인터뷰를 위해 서울에 갔던 것을 제외하면 이번이 첫 서울 나들이다. 이제 한국어가 수준급이다. 한국어 소통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처음에는 놀리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괜찮아요, 친한 친구들도 생겼어요”라고 말한다. “학교 생활 어때?”라는 질문에 모두 폐창을 한다. “재밌어요!”

놀이공원에서 보낸 하루는 흥분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막내 그라시아는 낙하 장면을 온몸으로 무한 반복 재생한다. ‘이거 타요’, ‘저거 타요’ 하며 어른들 손을 잡고 끄느라 정신없다.



한국에 온 지 2년여가 되어가는 루렌도 가족이 놀이공원에 나들이 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루렌도 씨는 호뭇한 ‘아빠 미소’로 아이들 모습을 핸드폰에 담느라 정신이 없다. 보베테 씨도 “굿 데이”를 연발한다.

동행한 한국 어린이(초6)는 이제 루렌도 자녀들과 스스럼없이 논다. 2년 전 인천공항에서 만난 이래 여러 번 루렌도 가족을 방문한 이 어린이는 루렌도 부부의 자녀가 예의도 바르고 쾌활해서 좋단다. 로데도 “언니, 언니” 하면서 이 아이를 잘 따른다. 수학을 제법 잘한다는 로데는 의사가 꿈이다.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자기 꿈을 야무지게 말한다.

부부는 네 자녀가 잘 자라 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둘째 딸 로데와 한국인 친구가 기워, 바위, 보를 하며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이 메시지는 6월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2019년에는 1년간 구금돼 있던 이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하며, 구금된 이주민 석방 요구를 외면했다.

이 기사는 마중 측이 제공한 세 명의 메

시지 중 한 편으로, 영어와 한글 번역본을 대조해 다듬은 것이다. 휴대폰 소리 금지, 부실한 식사, 역olum한 구금 과정 등을 담고 있는 나머지 두 편도 온라인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제 이름은 K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난민 신청자로서 1년 7개월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듯이 대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이고 난민 신청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난민들은 자칫하면 범죄자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 같

은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식단 변화도 없이 몇 달 동안 빵과 계란, 샐러드만 받았습니

다. 보호소 당국은 우리 건강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지만 진통제만 겨우 제공받을 뿐입니다. 보호소 당국은 우리를 [외부] 병원에 데려갔을 때 우리가 의사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호소 당국이 우리 문제를 의사에게 말합니다. 보호소 당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가 말하게끔 하지도 않습니다. 의사가 우리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보호소 당국은 의사에게 우리가 구금돼 있고 난민 신청자여서 돈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고려하지 않고 약을 줍니다.

제 건강도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호소 당국이 저를 외부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

습니다. 보호소 당국은 저를 밖으로 데려갔고 의사에게 아무 약이나 주라고 했습니다. 보호소 당국은 제가 매일 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불평하자 보호소 당국은 진통제를 줬습니다.

보호소 안에서 소란이라도 피우면 보호소 당국은 우리를 독방에 가둘 것입니다. 그곳은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샤워실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3일, 5일, 혹은 7일 동안 수갑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꼬리표를 붙일 것입니다.

때때로 보호소 당국은 보호외국인의 영상을 찍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소리 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외국인이고 난민 신청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거나 지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거나 난민 신청자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 주십시오. 우리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소책자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김어진, 이현주, 임준형, 차승일 지음,
노동자연대, 90쪽, 4,000원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장호중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할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 중 일부는 실제 현실을 많이 앞질러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백신 접종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첫째, 5월 이전에 백신 접종이 매우 느렸던 것은 정부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방역(요즘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다)을 자화자찬했지만, 정부는 백신을 스스로 개발하지도 국내 생산량을 늘리지도 못했다. 정부가 '확보'했다던 백신은 연거푸 공급이 지연됐다. 지금도 백신이 제때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처지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3분기에 들어오겠다는 백신 물량 중 노바백스 사의 백신은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했다. 유엔이 주도하는 백신 공급(코백스)은 거듭 지연되고 있다. 백신 원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언제 해결될지도 미지수다. 최근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주요 선진국 지도자들은 백신 특허권 면제에 대해 입도 뵙긋하지 않았다.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마치 공급이 아니라 접종률이 문제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백신은 언제나 부족했다. 심지어 6월 18~19일에 백신 접종을 예



개학 이후 여러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보고됐지만 정부는 전면 상시 등교 계획을 내놨다

약한 60~70대 수십만 명이 백신을 맞지 못했다.

게다가 안전성 논란에는 정부 자신이 백신 공급 지연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탓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분을 모두 1차 접종에 사용해 버렸다. 당장 7월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76만 명에게 줄 백신이 부족해졌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차 접종'이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사과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거나 안전성 논란에 따른 사람들의 화이자 선호도를 이용할 뿐이다.

일부 시험 결과도 내세우지만, 현재

까지 교차 접종 시험 대상은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 각각의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임상시험 대상자(수만 명)의 100분의 1가량이다.

영국과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교차 접종 임상시험은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다. 영국의 시험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유명해진) '경증' 이상반응을 더 많이 겪었다고 보고됐다.

변이 등장

둘째, 당장은 사망률 감소로 안도감을 느낄지 몰라도 여전히 인구의 70퍼센트가 백신을 맞지 못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인구의 10퍼센트가 안 된다.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실내 생활이 늘어나고 에어컨 사용도 는

다. 지난해 여름에 2차 확산이 일어난 이유다.

게다가 알파 변이(영국 변이)보다 감염력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인도 변이)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현재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인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인도 변이도 60~80퍼센트 예방할 수 있다지만, 1차 접종으로는 막지 못한다. 즉, 바이러스의 변이가 백신을 바짝 따라잡았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가 60퍼센트에 이르지만 최근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집단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전면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기 때

문이다. 학생들에게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백신 접종을 마친 교사들에게서도 '돌파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크게 둔화하며 50퍼센트 수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자 정부 담당자들이 올 겨울 4차 유행을 대비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요컨대, 백신과 변이의 경주에서 백신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던 선진국에서조차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를 거듭하며 추격하고 있다. 특히 인도 변이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백신 효과로 예전처럼 사망률이 치솟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면 상시 등교 계획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1학기 등교 수업을 강행하면서 학교 내 감염률은 매우 낮다고 한 바 있지만, 실제 개학 이후에는 여러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보고됐다. 가정 내 감염보다 빈도가 낮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등교는 정부 결정으로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귀가는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지나해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2~3차 유행을 초래한 바 있다.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신호는 추가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이 또 다른 변이의 발생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선불리 방역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 백신 공급을 늘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생계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취약계층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감염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화하려 한다.

선진국 지배자들이 수많은 빈국 대중을 죽음으로 몰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진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는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시 겨울로 접어드는 남반구, 특히 라틴 아메리카 상황이 심각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남미 나라들은 올해 3월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감염의 43퍼센트를 차지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브라질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다시 늘고 있다. 백신 접종률(1차)이 30퍼센트가량 되지만 역부족이다.

방역은 나 몰라라 하는 우익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이 한층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브라질 한 응급실의 모습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생지옥'에 비유되던 인도 일부 주에서는 정부 발표 사망자 수보다 최소 다섯 배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제대로 파악될 리 없는 아프리카에서도 공식 통

계로만 500만 명이 확진됐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들에서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0.8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수십억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는 만큼 추가 변이 발생 가능성은 차츰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G7 정상회담에 모인 주요 선진국 지도자들은 이 사태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G7 정상들은 앞으로 1년 동안 10억 회(5억 명) 분의 백신을 빈국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조차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 정작 백신을 얼마만큼 각국이 부담할지가 빠져 있었던 것."(〈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런 결정은 특허권(지적 재산권) 면제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특허권 면제를 주장했던 바

이들은 G7 회의에서 이에 관해 침묵한 채 자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 지원만을 약속했다. 백신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진정한 관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모더나 백신 250만 개를 지원한 것도 그 일환이다. 바이든이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백신 8000만 개 중 지금까지 그 대상이 확정된 곳은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 외에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공을 들이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주요국들이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체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게 되더라도" 기업주들의 이윤만은 지키겠다는 일부 지배자들의 생각은 더 확고해지고 있는 듯하다.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정선영

이 글은 6월 18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유화 조치를 취했다.(이미 3월부터 이를 유예해 왔다.) 동맹과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동맹국들의 협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재조사, 대만해협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등 중국을 압박할 쟁점들이 두루 언급됐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에 G7 국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이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제3세계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해 일부 문구의 조정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줬지만, 당장은 유럽 열강들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바이든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 산업에서 중국 배제 추진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은 더욱 커져 왔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무역관세 인상 조치를 유지한 데 이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중국 배제도 역력하다. 바이든 정부 들어 투자 규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이 트럼프 정부 집권 기간 48곳에서 59곳으로 늘어났다. 미국 지배자들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고화하는 것이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 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서 급속히 성장했다.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편, 중국은 다른 신흥국들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자국에서 조립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의 세계적 생산망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서방 기업들도 많은 이윤을 벌어들였다.

예를 들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 중국 압박 강화를 보여 준 G7 정상회의. 미·중 갈등 심화 속에 한국 지배자들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본사에서 아이폰 디자인과 설계를 하고, 대만 기업인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한다.

소매가격 600달러인 아이폰4를 팔아 애플이 270달러, 애플의 중국 내 유통업체가 90달러를 가져간다. 그리고 부품업체가 187.5달러를 가져가는데 그중 한국 기업들이 80달러, 미국 기업들이 24.6달러를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독일·프랑스·일본 순이다. 이래저래 미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버는 구조다. 중국이 생산조립만 해서 버는 금액은 6.54달러에 불과하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다. 아이패드 에어 16GB 모델의 판매 비용 중 30퍼센트를 미국 기업들이, 7퍼센트를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지만 중국 기업들은 겨우 2퍼센트만 가져간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는 이런 조립기지에 한정되지 않고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비가 급증했고, 10대 첨단 기술 중에서도 특히 수가 가장 많은 품목도 많다(그래프1). 대표적으로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는 5G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5년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전기차, 전력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퍼센트로, 2025년에는 70퍼센트 수준까지 달성하겠다고 계획했다. 2035년엔 독일과 일본을 제친 뒤 2049년 미국까지 추월하겠다고도 했다. 매우 야심 찬 목표이지만 달성 가능할지 미지수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기업들의 이윤을 위협하고 경쟁 압력을 키우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또 5G,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첨단 기술 경쟁은 군사력에도 직결된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중국의 통신기업 ZTE 등을 제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라는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 판매를 중단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기업 등을 제재한 데 이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을 중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2월 100일 안에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고 이 보고서가 최근 제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의 제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침투가 상당한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디커플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중 갈등을 키운 뒤에도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해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대만의 핵심 반도체 기업이 미국 측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애플은 당분간 중국에서 생산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인도에서도 생산을 시작하는 등 다국적기업들이 생산망을 다변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첨단 기술 갈등이 심화하고 이 영역의 국제적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디커플링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아시아 군사 긴장 심화

게다가 만약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런 경제적 변화가 더욱 급진전될 수 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은 지정학적 위기로도 발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군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여전히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만큼은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려 해 왔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이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G7 정상회담 이후에도 바이든은 나토와 손잡고 대중국 군사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서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했다. 물론 독일 총리 메르켈은 이 규정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도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 같은 유럽 열강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한다. 그러나 모순이게도 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벌이는 데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오는 8~9월에는 유럽 각국의 군대가 아시아로 모여 군사 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현재 지중해를 통과하고 있고,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 샤를 드골함, 독일의 호위함 등도 아시아

향진 대열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과 연합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제1차세계대전 전에도 영국과 독일, 독일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교류는 활발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런 경제적 교류는 급속하게 단절됐다. 만약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지적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존 경제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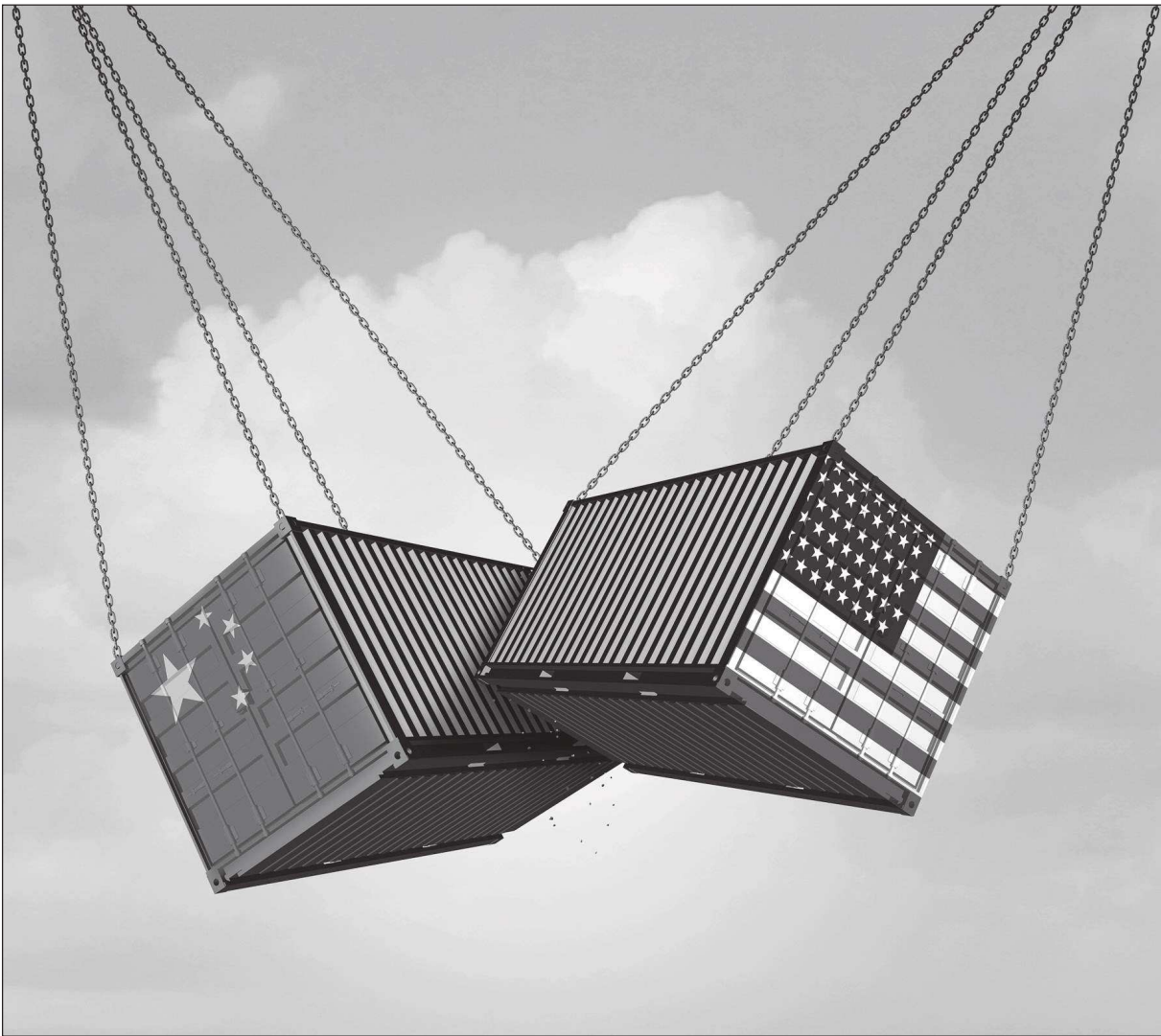
점점 현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지배자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흔히 기존의 관계를 두고 '안미경중'이라고 말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의존도는 30퍼센트 이상으로 미국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가장 심했던 2019년에 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했고, 올해 대중국 수출 비중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과 미·중의 관계가 안미경중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늘긴 했어도 경제적 영향력 면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2007~2009년 세계금융 위기가 미국의 위상에 타격을 주기는 했다.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지위는 오히려 더 공고화됐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2007~2008년과 2020년 공황에 대응하려고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하며 달러의 흐름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



력도 무시할 수 없다.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 반도체 설계를 하며 생산을 지휘하는 구실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벗어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아예 제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동맹은 여전하다. 성주사드, 평택 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의 주요한 군사 거점들이고 모두 중국을 겨냥한 기지들이기도 하다. 한국의 제주해군기지에도 미군 군함이 정박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동의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돼, 한국은 사거리를 늘린 새 미사일을 개발·배치하려 한다. 이는 중국을 자극해 역내 갈등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인해 경쟁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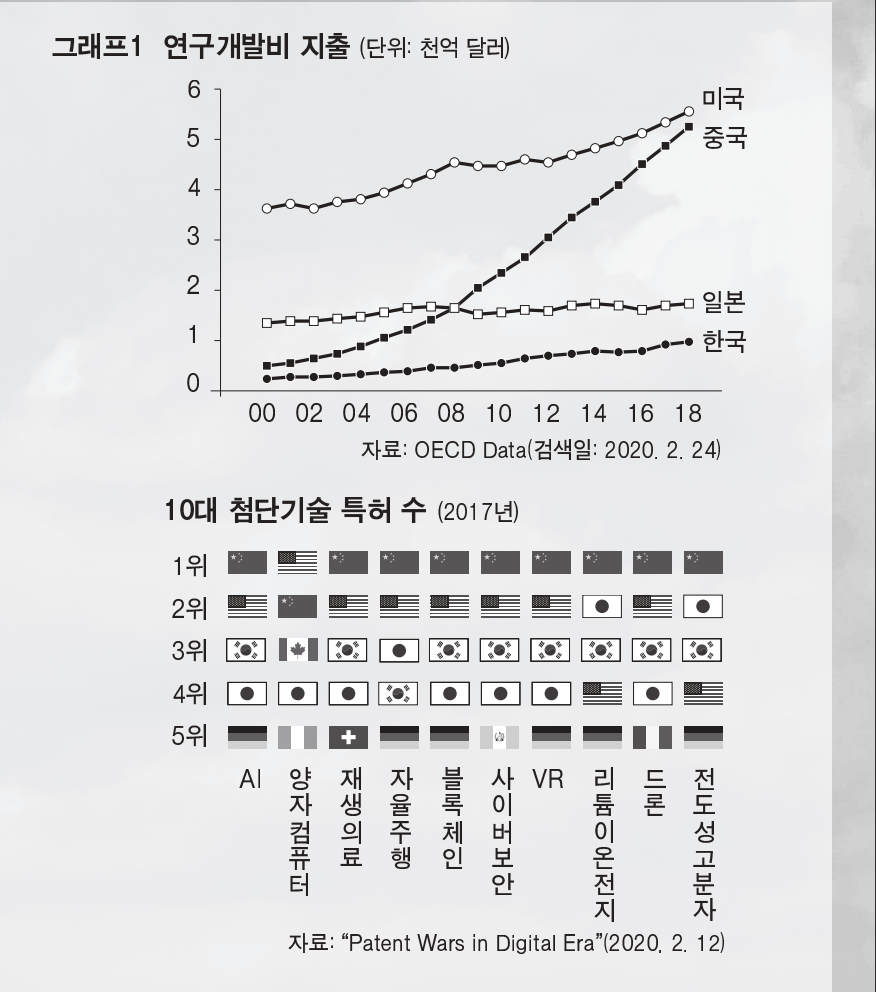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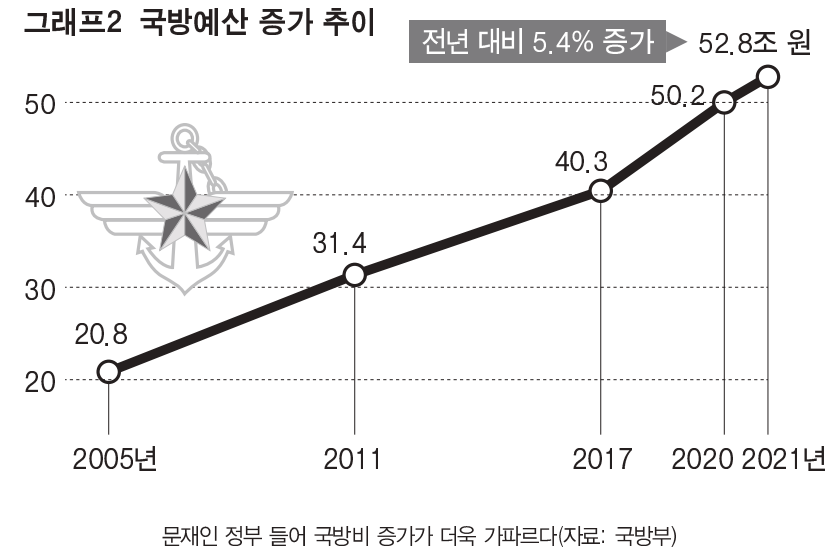
그래서 한국 기업들 내에서는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타격을 입기를 바라면서 그 공백을 한국 기업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이후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대신해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5G 수주를 따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어느 수준을 넘어 더욱 격화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바이든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대한 투자를 해 놓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의 가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퍼센트가량은 중국으로 향한다(홍콩 포함).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에 디커플링이 벌어져 만약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1997년 IMF 위기 이상의 위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제재로 중

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미중 갈등이 격화돼 중국 내 사업이 방해받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틈바구니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윤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양다리 전략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패권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한국 지배자들의 처지는 더욱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만약 미·중 간의 경제, 군사적 갈등이 심화돼 정말 어느 한편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을 택할 것이다. 물론 영국의 지배자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브렉시트가 이뤄졌듯 어떤 돌발적이고 정치적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겠지만 말이다. 대기업들의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소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 세계 GDP의 65.8퍼센트에 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외교?

이런 상황에서 우파들 내에서는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김종인은 “중국은 미국 대체 못한다”며 한국이 쿼드(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안보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초월외교를 표방해 왔다. 그러나 균형외교는 결코 공평무사한 중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모순은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G7 회의에 초대된 것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위상의 증대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환대를 받은 것이다. 스스로 미국 편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모순은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면 한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크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미국 편이 확고함에도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는 것

은 중국에게 일본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한국도 이런 지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처럼 한국도 첨단 산업 기업들에 세금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재용 사면 요구도 더욱 커졌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군비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군비 증강 비율은 이전 정부들보다 더 높다(그래프2).

반(反)제국주의가 중요하다

현 상황의 내재적 동학은 제1차세계대전 전에 제국주의적 갈등이 격화하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세계 1위 패권국이던 영국의 지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영국에 도전하며, 그들 간의 충돌이 전쟁으로 발전했다. 당시에도 독일과 영국 사이에 경제적 교류와 투자는 활발하게 이뤄졌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인 충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 카를 카우츠키는 국경을 넘어서 자본의 투자가 발전해 갈수록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초제국주의론).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가들인 레닌과 부하린은 불균등 발전 때문에 초제국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불균등 발전으로 말미암아 경제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계속 바뀌고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순위도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패권 국가가 바뀌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맹주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쟁투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의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의존하고 있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 갈등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황을 그렇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경

쟁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려서 일어난다. 국가들이 가진 막대한 무기는 결코 장식품이 아니고, 지배자들은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협력하는 등 미·중 간의 위험한 경쟁에 더 깊이 발을 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해 보자고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남북 관계도 근본에서 결국 미·중 관계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 지배자들의 태도를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 때문이라거나, 미국에 단지 ‘당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식으로 보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이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경쟁 심화 속에 한국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력 강화 논리는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이윤 경쟁, 군비 경쟁을 위해 임금, 복지 등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제적 경쟁 논리가 군사적 경쟁으로도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강화 논리를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을 듣거나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반제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정부의 권위적인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 몇 해 전 홍콩에서도 항쟁이 벌어졌었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저항도 일어났다. 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맞서는 아래로부터 투쟁이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울 혁명적 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레닌주의는 무엇인가? — 오늘날의 의미

이 글은 5월 9일(현지 시각) 헝가리게 영국인 마르크스주의자 **토마시 뱅글리-에 반스**가 한 강연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안의 내용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녹취를 해 준 한가은 동지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갈림길에 와 있다는 점이 지난해 거듭 드러났다.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인간보다 이윤을 앞세워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뒀다. 팬데믹은 바로 환경 파괴에서 비롯했다. 경제 대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 재앙의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에 대응해 국제 협력과 국제주의를 증진시켜야 마땅할 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은 오히려 제국주의 경쟁을 가속시켰다. 세계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핵전쟁과 유혈 충돌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파멸과 절망만 남은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힘을 활짝 보여 준 저항들도 있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내고 체제 자체에 반대해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할 투쟁들이 벌어졌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용감하게 맞선 대중 항쟁이 일어났다. 강력한 거리 시위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도 벌어졌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에 맞서 싸웠고, 보건 노동자들은 쿠데타 초기부터 단체 행동을 벌였다.

인도에서는 농민들이 매우 전투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경찰을 트랙터로 밀어 버리려고 했다.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시위대는 경찰이 친 바리케이드를 돌파했다. 이 농민 시위는 조직 노동자들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라앉았다.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토론회에서 토론해 볼 것이다.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

다들 자본주의가 갈등과 투쟁을 달고 사는 체제임을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레닌은 1917년 러시아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자본주의는 계급 분단에 바탕을 둔 사회다. 투쟁이 사회에 내장돼 있다. 상이한 계급들의 이해관계를 화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새 일어난 대중 저항과 거의 혁명에 가까운 항쟁을 열거해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진다.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저항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9년에는 국제적인 기후 동맹휴업 등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일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 운동이었다.

이런 커다란 운동들에서는 언제나 중요한 물음이 제기됐다. 운동의 전망을 체제 내 개혁들을 점진적으로 쟁취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해 그 운동을 다른 운동들과 연결하고, 체제 자체를 반대해 체제를 없애 버리는 것으로 나아갈 것인가?

레닌의 기여

러시아 혁명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정치는 이 물음에 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레닌에 대한 왜곡이 많다. 레닌은 교조주의자, 독재자였다고들 한다. 그래서 스탈린주의도 레닌에게서 비롯한 것이어서, 1920년대 말부터 무시무시한 독재를 자행한 동구권[옛 소련 블록]의 스탈린주의 지배체제도 레닌 때문에 생겨났다고 한다.

이는 참말이 아니다.

레닌의 정치는 체제가 수많은 일반 대중의 삶을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던 엄청난 위기 시기에 형성됐다. 지금은 팬데믹이 한창이고 국가 간 충돌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레닌은 전례 없는 상황과 씨름하며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켰다. 레닌의 사상은 결코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체제에 반대한 투쟁에서 검증된 사상으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레닌은 생애의 많은 시기를 제2인터내셔널에서 보냈다. 제2인터내셔널은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의 연합체로,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프랑스 사회당 등이 있었다.

그러나 레닌의 볼셰비키당은 [제2인

터내셔널과 결별하고] 1917년 사회주의 정당들 중 유일하게 노동자 혁명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레닌이 마르크스주의 정치에 한 기여를 말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제국주의,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문제 등등.

이 자리에서는 그의 사상 중 어떻게 운동에서 혁명으로 나아가느냐는 물음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핵심이자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사회주의 이해에 핵심적인 것은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과 권력 장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나머지 계급들에 헤게모니를 행사하며 지배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노동계급 대중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다. 우리는 기존 국가를 통한 개혁이나 국유화를 사회주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이 중요하다.

레닌의 정치에서 중심적인 주제는 노동계급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지배 계급이 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국가와 혁명이다. 앞서 살펴본 운동들은 결국 국가라는 문제에 부

딴했다.

다른 하나는 혁명적 정당이다. 혁명적 당이란 광범한 노동계급 투쟁과 체제 반대 운동의 일부이면서도 별도로 조직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운동 내에서 혁명적인 견해를 독자적으로 펼 수 있는 당을 말한다. 모든 운동에서는 개혁주의적 견해와 혁명적 견해가 충돌을 빚는다.

국가와 혁명

국가를 개혁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국가에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고, 실제로 국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국가에 관한 레닌의 견해는 그의 저작 전반에 스며들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책자 《국가와 혁명》이 특히 중요하다. 그 소책자에서 레닌은 국가가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의 산물이자 표현이라고 했다. 국가는 계급 대립이 객관적으로 화해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즉, 국가는 분열된 사회를 초월한 중립적인 관료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기존 질서를 지속시킨다.

의회를 보면, 의회는 선출되지 않는 거대한 관료 기구들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는 노동계급 대중의 민주적 압력과, 그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린실 스캔들[최근 영국의 집권 보수당을 둘러싸고 불거진 부패 스캔들]을 보라. 대중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네트워크가 정책을 좌우하고 중대 사안에 입김을 넣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의 진정한 구실을 드러낸 최근의 운동들을 보라. 그런 기구들은 중립적 행위자가 결코 아니며 자본주의 국가의 명실상부한 일부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 권력이 무엇으로 이뤄져 있는지 묻는다. 그 권력은 특별한 무장 집단과 수감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레닌은 답한다. 경찰과 군대도 자본주의 국가 권력의 중요한 도구다.

위 사진은 영국의 경찰법 개악 반대 시위대에게 경찰견을 동원한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꾸며 내고는 언론사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라 에버라드의 죽음[영국에서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납치·살해된 사건]에 항의하는 운동, ‘흑인 목숨도 소

본질적으로 국가는 강압적인 계급 지배의 수단이다. 3월 26일 경찰법 개악 반대 시위 진압에 경찰견을 동원한 영국 경찰



사진 출처: Esam1015

혁명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2019년 수단 항쟁은 혁명적 당의 중요성을 보여 준 최근 사례다. 2019년 4월 하르툼의 군사 본부 인근을 점거한 시위대

중하다' 운동, 경찰법 개악 반대 운동 등은 실로 국가 기구의 진정한 성격을 어느 정도 들춰내, 레닌의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기구들은 노동계급에 이롭게 사용할 수 없다. 좌파 정당이 집권해도 경찰과 군대는 사회주의 경찰과 사회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국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양하게 있다. 요즘에는 레닌주의 국가론에 관해 이런 반박도 나온다. “알겠어, 토마시. 근데 레닌은 러시아 사람이었잖아. 거긴 차르가 통치하던 나라였다고! 지금 영국은 완전 달라. 의회 민주주의잖아. 게다가 신자유주의와 다국적기업 때문에 국가는 전보다 덜 중요해졌어. 또, 국가는 국민보건서비스(NHS) 같은 유익한 일도 해.”

이런 식으로 레닌주의 국가론을 조야하다고 깎아내리고 논박하려 한다. 그러나 레닌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볼셰비키 당원인 부하린이 이런 류의 주장을 이미 반박한 바 있다. 부하린은 《제국주의 국가론을 향하여》라는 책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그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장기적 자본 축적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가들은 건강하고 잘 교육된 노동력 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둘째, 그런 양보는 또한 지배자들이 노동계급 투쟁이 심화될 것을 두려워해 그 투쟁을 달래려는 것일 수 있다.

레닌과 부하린 등의 볼셰비키는 국가를 둘러싼 여러 물음에 답하려 했다. 그러나 부하린이 지적했듯 국가가 사

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다 해도, 그 국가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국가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영속시키려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운동들, 예컨대 미얀마·벨라루스·수단의 항쟁들에서는 국가와 어떻게 대결해야 하는지, 국가에 맞서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 그러려면 노동계급 대중은 자신의 민주적 기구를 건설해서 실제로 정치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권력으로 기존 국가를 분쇄한 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혁명적 당

레닌 사상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혁명적 당에 관한 것이다. 애당초 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냐는 주장이 한 동안[특히 2000년대 초반부] 있었다. 이런 주장은 다양한 사회운동 내에서 지금도 제기된다. 예컨대 ‘멸종반란’이나 경찰법 개악 반대 운동에서, ‘정당은 필요하지 않아. 모두가 평등한 수평적 네트워크만 있으면 돼’ 하는 주장이 흔히 나왔다.

지금은 논쟁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사상[자율적 사회운동이라는]이 한때 꽤 우세했던 것은 세계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스탈린주의 정당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패와 위기는 지금도 볼 수 있다. 올해 5월 영국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자기 텃밭인 하틀풀에서 거둔 처참한 성적을 보라. 장기적으로 노동당은 자신의 노동계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잃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위기는 노동당 같은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만이 겪는 게 아니다. 몇 년 전[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부상하던]을 떠올려 보자.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가 연립 정부에 참여했고, 그리스에서는 시리자가 집권했으며, 영국에서도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정부 수립 가능성을 넘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대선에 도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포데모스 안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보면, 포데모스는 체제의 포로가 됐고, 자신이 약속한 변화를 이뤄 내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집권한 시리자는 대중의 변화 염원을 배신하고 직접 가혹한 진축 정책을 시행했다.

국가와 의회 정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책략에 몰두하는 개혁주의 정당과는 다른 대안이 무엇이나냐는 중요한 물음이 제기된다.

레닌주의 정치가 혁명적 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지 국가가 조직돼 있으니 혁명가들도 조직돼야 한다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 레닌이 혁명적 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옳아. 무시무시한 차르 체제를 상대하고 있었으니까. 수단이나 이집트에서도 그런 조직이 필요할지 모르지.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는 혁명적 당이 필요 없어.”

이런 주장은 혁명적 당이 필요한 핵심적 이유를 오해한 것이다. 혁명적 당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순 때문에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인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꿈꾼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이라고, 노동계급이 스스로 해방돼야 한다고 본다. 해방은 위에서 누군가가 하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어느 시대든 지배적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사상에 의해 체제에 예측된 상태에서

스스로 해방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노동계급이 어떻게 전체 사회에 헤게모니를 행사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노동계급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봐야 한다. 혁명적 당이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 압도 다수의 사고가 불균등하다는 데에 있다.

소수 노동자들은 일관되게 반동적이다. 이들은 줄곧 사용자 편을 들고 지독한 편견에 찌들어 있다. 한편, 다른 소수 노동자들은 혁명적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끝내고 싶어 한다.

압도 다수의 노동자는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개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체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개혁주의 정당들이 그들더러 개혁주의자가 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사고가 형성되고 바뀌는 방식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들의 사고는 지배자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지배자들은 예컨대 언론을 통해 온갖 쓰레기 같은 관념들을 퍼뜨린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는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헛소리에 휘둘리지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경험도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집단적 투쟁 경험은 사고를 변화시킨다. 사람들은 신문에서 이민자를 힐끔는 온갖 헛소리를 읽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민자들과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겪는 경험 등이 이민자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추천 책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

마이크 곤살레스 외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352쪽, 14,000원

레닌과 21세기

존 몰리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472쪽, 20,000원

계급투쟁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체제 내에서 개혁을 쟁취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그렇구나! 투쟁을 하면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사업장 쟁점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영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가 17세기 영국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틴의 동상을 무너뜨린 것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개혁이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던가!

물론 시위대는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려 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체제 전체와 대결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경찰을 아예 폐지한 사회를 만들자는 발상은 혁명적인 사상이며 여전히 극소수의 것이다. 그래서 혁명적 당은 체제 자체를 일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집시켜 혁명적 단체로 조직하고자 한다.

그러나 혁명적 당은 투쟁과 동떨어진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혁명적 당은 현재 벌어지는 투쟁에 참여하고 그 일부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별도로 조직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운동 내에서 중요한 논쟁 — 국가 기구의 도전에 직면해 물려설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기 전에 요구 수준을 낮춰야 하는가? 등 — 이 벌어질 때 실제로 체제에 반대해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 운동을 다른 투쟁과 연결시켜 더 큰 혁명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레닌주의 당은 엘리트적인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주장이 하나 있다. 레닌이 말한 혁명적 당은 엘리트적이라는 주장이다. 혁명적 당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노동계급에게 과제를 일러 주겠다. 우리는 대중을 지도할 전위다’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레닌의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붙들고 늘어진다. 레닌은 그 소책자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은 오직 노동계급 외부에서만 들여올 수 있다”고 썼다. 그래서 레닌주의자들은 뭐든지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노동계급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레닌의 글은 언제나 당대에 벌어진 구체적·정치적 논쟁 속에서,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쓴 것이다. 레닌이 그런 말을 쓴 맥락을 봐야 한다. 당시 레닌은 ‘경제주의자’라고 불린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혹시 ‘경제주의자’라는 명칭을 보고 ‘경제 분석에 몰두하는 사람을 뜻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주의자들은 임금이나 일자리 같은 나날의 문제를 둘러싼 일상적 투쟁들을 하다 보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조류였다.

레닌은 경제주의가 노동자 운동을 특정 부문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투쟁들로 체계적으로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레닌이 정치 의식을 “외부에서만 들여올 수 있다”고 한 것은 “경제주의자들이 한 극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레닌은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누군가가 반대 방향에서 잡아당겨야 했다”고 썼다.

레닌은 노동계급이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 모두의 옹호자가 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우리는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 문제에 갇혀서는 안 된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든, 어디서 비롯한 것이든 모든 억압과 차별 사례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계급 속에 퍼진 반동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관념들을 노동계급에게서 씻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억압과 차별 사례들을 일반화해 국가 폭력과 자본주의 착취라는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레닌의 요지였다.

다시 말해, 레닌은 혁명적 당을 그저 노동계급 바깥에서 노동계급에게 지시나 내리는 조직으로 여기지 않았다. 레닌이 보기에 혁명적 당은 노동계급의 일부, 더 광범한 투쟁의 일부여야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개혁주의적인 사상과 반동적인 사상에 맞서 싸우고 체제 전체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이끌 수 있어야 했다.



혁명적 당은 현실의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운동의 승리를 위한 주장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그러면, 이제 혁명적 당이 어떻게 사태를 바꿀 수 있고 왜 필요한지를 놓고 최근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겠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도 많은 사례가 있었고, 당시 러시아와 유럽 정치에 관해서라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훨씬 최근 사례를 들어 보겠다.

수단에서 일어난 일이 매우 좋은 사례다. 수단에서는 알바시르의 독재 정권에 맞서 거대한 대중 항쟁이 일어났다. 항쟁은 독재자를 몰아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군부가 지배하는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다. 수도 하르툼과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군 본부와 가까운 광장들을 점거했다.

사람들은 광장에서 혁명 위원회를 설립했다. 목격담을 들어 보면, 당시 노동계급 권력이 탄생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항쟁 참가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 싸우며 그 국가 없이도 스스로 사회를 운영하고 조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좌파 신문도 아닌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쓸 정도였다. “1917년 러시아에서 차르가 타도됐을 때 러시아의 분위

기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 2019년 4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기업주들의 신문조차 당시의 수단을 두고 ‘혁명이란 이런 것일 테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거기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당시 수단에 혁명적 당이 있었다면 이런 주장을 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세운 혁명 위원회들을 보시오, 이제는 노동자 평의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생산을 장악해 군사 정권한테서 경제적 권력을 실제로 빼앗아오고, 사회를 운영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러나 수단에는 혁명적 당이 없었다. 그 대신, 반란을 이끈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군부와 형편없는 합의를 했다. 물론 그래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계급 자신이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 핵심이며, 개혁주의 지도자들에 기대서는 이를 성취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혁명적 조직이 있었다면 사태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21세기에도 왜 여전히 레닌주의의 조

직이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혁명적 당은 미리 준비돼야 한다

혁명적 당은 하루아침에 건설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세워진 그런 당이 “여기 좀 봐 봐, 우리는 혁명적 당이야. 현 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우리 지도를 따라 줘” 하고 선언해도 그 영향력은 결코 클 수가 없다.

레닌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볼셰비키당을 건설했다. 볼셰비키당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 시허를 치르며 실수도 했지만 옳은 판단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광범한 노동자 운동과 당대에 벌어지던 운동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혁명적 당을 건설하는 과정은 결코 일방향이적이지 않다. 노동계급의 자력해방, 국가의 성격 등을 잘 이해하는 똑똑이 집단이 리더십을 제공하기만 하는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혁명적 당은 노동계급 투쟁의 경험에서 배운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보자. 그 혁명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던

것은 ‘소비에트’라는 노동자 평의회였다. 소비에트는 레닌이나 볼셰비키가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소비에트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조직하려고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레닌은 소비에트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이런 기구들이 혁명적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혁명적 당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일방적이거나 엘리트주의적이지 않다.

내가 속한 정당(사회주의노동자당)도 현재 벌어지는 광범한 투쟁들의 일부가 되려 한다. 그러면서도 그 투쟁들을 연결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혁명적 방향을 가리키려 한다.

레닌주의 정당은 완제품이나 기성품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과 혁명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명적 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저런 쟁점을 둘러싼 운동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물론 그 승리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가는 시스템 전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번역 이원웅 녹취 한가은

브라질 보우소나루 반대 시위가 더 커지다

소피 스콰이어

지난주에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6월 19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약 7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5월 29일 시위보다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 스물여섯 개 주(州) 중 최소 스물두 개 주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

소나루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제껏 브라질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11퍼센트에 불과하다[1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30퍼센트는 점도 규탄했다.

시위대는 보우소나루의 정책들이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보우소나루 물러나라. 굶주림과 실업의 정권”, “50만 명의 죽음. 보우소나

루 탓이다” 하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현재 보우소나루는 위기에 처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의회 조사를 받고 있다.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겨우 24퍼센트만이 보우소나루 정부가 “잘한다”거나 “매우 잘한다”고 여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60호 번역 김준호



6월 19일 상파울루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사진 출처: Kebab(클라기)

팬데믹으로 노동자들이 감원된接客업 등에서 이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자본가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또 덜컥 상승했다. 그들은 임금 상승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 임금이 상당히 오르면 이윤 전반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가격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지도 모르며, 이런 식으로 1970년대처럼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소셜리스트 워커〉[이 기사가 실린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의 전 편집자 크리스 하먼은 임금 인상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당시에 입증했다. 그러나 많은 지배계급 논평가들(예컨대, 전 IMF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전염병 창궐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런 공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개선됐다고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실질 임금은 대체로 상승했다. 죽음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 질병이 노동자 수를 줄여서 생존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끔찍하게 많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1340년대 흑사병에 비할 바는 아니다. 당시 흑사병은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고용 전문 칼럼니스트 새라 오코너는 1351년 ‘노동자 법령’의 구절을 인용한다. “하인의 부족과 주인의 정직함을 이용해, 과도한 임금을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

실제로 임금 상승의 조짐이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비관리직 노동자 급여

는 연율*로 거의 7퍼센트 인상됐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接客업에서 그렇다.

오코너는 이런 논의에 회의적이다. 최근 급여가 인상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전보다 낮은 인상분을 받았다고 오코너는 지적한다. 대다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됐다.

노동력 부족에 관해 오코너는 이렇게 말한다. “일부 잠재적 노동자들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두려워한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 아니다. 요리사는 코로나19 남성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10개 직종 중 하나다). 다른 노동자들은 다시 이동 제한이 시행되면 또 임시휴직이나 정리 해고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은 가족 곁에 있으려고 귀국했는데, 다시 출국을 했다가는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국경 반대편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이런 위험과 잠재적 이득을 비교한다. 그런데 2019년接客업 임금의 중앙값은 8.64파운드[당시 영국 최저 임금보다 5.2퍼센트 높은 수준]로 다른 어느 부문보다 낮고, 이 부문 인력의 5분의 1은 ‘0시간[호출 노동] 계약을 맺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임시 유급휴직 지원 제도에 불구하고,接客업과 레저 산업 사용자들은 노동자 5분의 1을 감원했다.

接客업

그런데 이제 이런 부문을 곳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로스앤젤레스 매거진〉은 이렇게 보도했다.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3년 동안 일한 한 22세 학생은 … 처음에 임시휴직을 하게 됐는데 레스토랑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직장에 복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을 제출했다가 해고됐다. 그후 그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 입학했고 예전보다 많은 돈을 받는 인턴십을 시작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뿐이죠. 박봉에, 일은 미친듯이 힘들고, 복지는 거의 없고, 지독하게 쪼아 대는 데다 근무시간은 끔찍하게 길고, 휴일 한 번 못 쉬는, 개인의 인격과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건 해고란 이름의 축복이었어요.”

폭발적이기보다는 소폭 급등에 가까운 최근의 물가 상승은 특정 부문들이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교란된 결과로 보인다.

컴퓨터 칩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늦춰져 중고차 가격이 오른 것이 그런 사례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말한 “일시적 충격”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바로 그러한 교란 덕분에, 그리고 임시 유급휴직 지원과 다른 일자리 지원금 덕분에接客업 등 저임금으로 악명 높은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들이 소위 “과도한”, 즉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요구를 성공적으로 쟁취하길 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60호 / 번역 최병현

용어설명

연율

1년 동안 계속 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의 연간 인상(성장)률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택배 현장

“2차 사회적 합의가 간과한 원·하청 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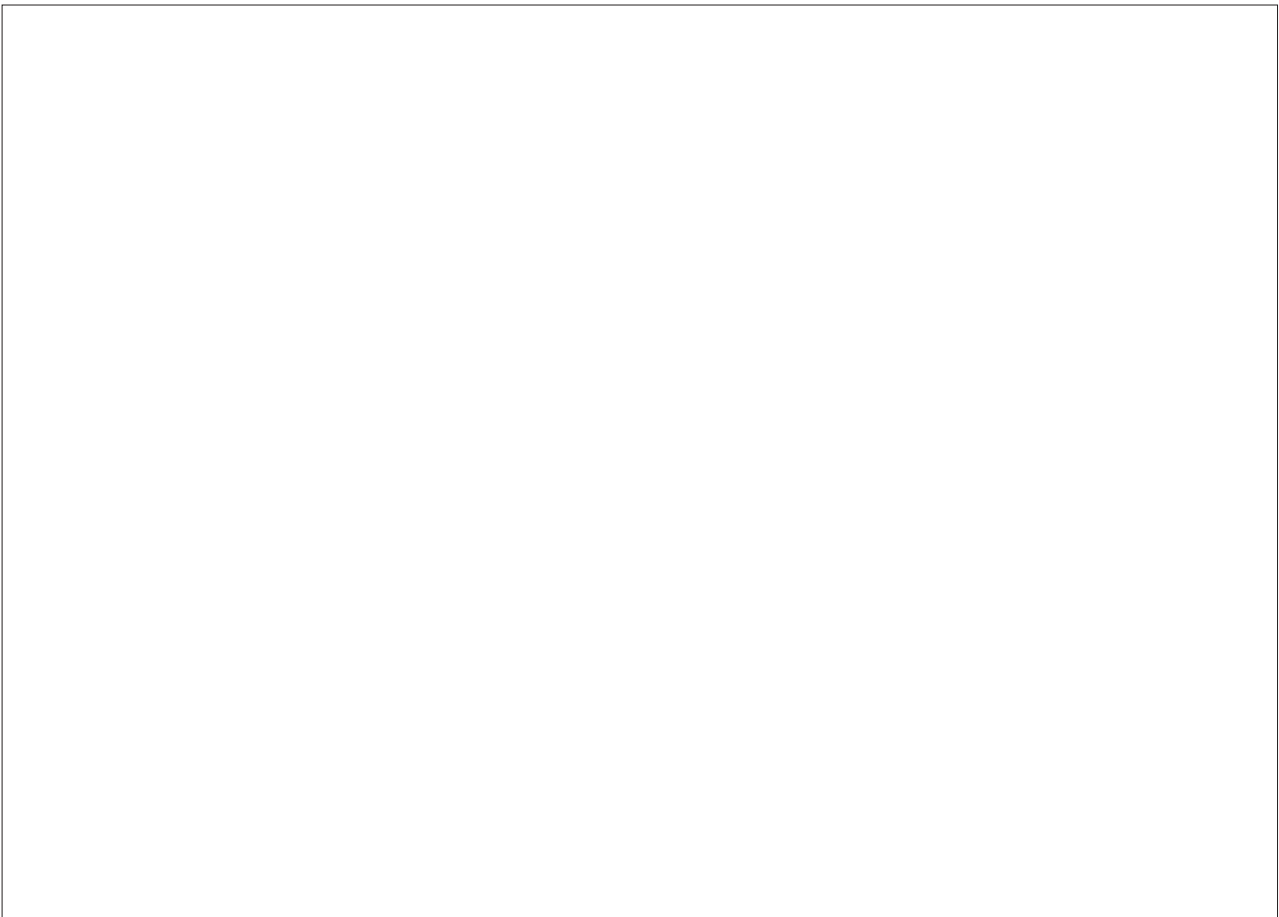
6월 16일 전국택배노조와 민간택배사가 합의한 데 이어 18일 우정사업본부와도 합의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분류 인력 총원 시기가 늦춰지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보전 방안이 없는 것에 노동자들은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2차 합의 내용에 대해선 본지 373호 '택배 노동자 투쟁 잠정합의: 과로사·장시간 노동 해결 회피하는 정부와 택배사'를 보시오.) 이 외에도 택배 현장에는 원·하청 구조와 노동자성 불인정 등에서 비롯한 문제가 산적하다. **김포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본지에 택배 현장의 여러 적폐들을 제보해 왔다.

“6월 18일에 경기도에 있는 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소장(이하 소장)이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당한 노동자는 소장이 그동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집화[접수된 화물이나 상품을 택배기사가 수거하는 것] 부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소장은 나가라고 했고, 그 노동자는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소장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임금 지연과 부대 비용 전가'를 소문 내고 다닌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노동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들의 다양한 횡포 중 하나에 불과해요. 소장 10명 중 서너명은 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아요. 그나마 노조 설립 후 좀 덜해졌는데, 소장들이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면 200만 원은 제 날짜에 넣어 주고, 나머지를 2주나 3주 있다가 넣어 주는 식이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소장에게 항의하면 '시스템이 맘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해요.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소장들과 배송 구역을 계약하고 택배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소장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를 모집해서 일을 주고 CJ대한통운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사실상 대리점 소장들이 중간에서 돈만 빼 가는 [구조인] 거죠.

우리 임금인 (배송)수수료를 소장들 마음대로 내리고 빼돌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CJ대한통운은 수수료가 지역별로, 인구밀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



CJ대한통운 택배 현장 택배비는 올랐지만 임금은 그대로, 게다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책임 회피와 비용 전가도 여전한 문제다



지난해 노동절에 참가한 택배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의 책임을 묻고 있다

요. 그런데 소장들은 원청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 기준마저 무시해요. 그래서 택배비는 올랐지만 우리 임금은 그대로예요.

월급명세서에 배송 수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알려 주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제 140개를 배송했는데 전산에는 120개로 돼 있기도 해요.

사무실 월세, 사무직원 비용을 마련한다며 택배기사 수수료를 10원 내리겠다고 통보했어요. 수수료 10원이면 기사 1인당 [월평균] 30만~4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비밀비재한 임금 체불·삭감

또, 집화 과정에서 대리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창고 및 대형 트럭 이용료](월 14만~20만 원)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송장[택배에 붙이는 스티커] 비용이나 반품 송장 비용까지 택배기사들한테 6년간 청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원가가 14.5원인데 30원으로 부풀려서 말이지요.

매달 3만 원가량을 회식비로 걷었는데, 3년간 회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고객 항의 등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적으로 벌금을 걷는데,

견은 돈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일부 소장들은] 분류 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CJ대한통운이 전국적으로 대리점에 분류 인건비 중 45퍼센트만 지원하고 있는데, 소장들은 이 비용조차도 온전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6년간 고용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개선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리점들의 '갑질'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청이 대리점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대로 남겨 둘 테니까요. 계약 기간만 6년으로 연장되었을 뿐, 표준계약서가 노동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결국에는 대리점을 없애고 원청 직접 계약으로 가야, 택배기사들이 살아요. 저는 14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에는]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어 중간에 돈을 떼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200개 배송하고 퇴근해서 아이들랑 놀 시간이 있었어요. 월급제는 아니었지만 4대 보험도 다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수료는 통보도 없이 낮아지고 대리점들은 온갖 '갑질'을 하며 기사들을 괴롭히는데도 원청은 [기사들이] 자신과 계약한 게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해요. 원청이 택배 기사들은 물론,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되레] '당신네 대리점에서 누가 노조 만들고 투쟁한다며?' 정리 안 하면 당신도 잘리는 거야. '당신네 대리점 고객 만족도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압박] 해요. 그러면 소장들은 택배기사들을 단속하고,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고, 수수료를 내리고 괴롭힙니다. 이게 몇 년간 계속되고 불만이 쌓여 노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있는 김포 지역은 노조를 설립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60명이 한 번에 가입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투쟁으로 보복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쟁의권이 없는 곳은 준법 투쟁 [분류 작업 거부], 쟁의권이 있는 곳은 파업을 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전 11시에 배송을 출발하는 준법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대리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더 열심히 투쟁하고 있어요. [노조 전체가 참여한] 투쟁을 종료하고 복귀를 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오전 11시 이후 분류되는 물건들은 배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 인력 총원 시기가 올해 말로 늦춰지고, 수수료 인상이 안 돼 아쉽습니다. 또한, 소장들의 비리나 '갑질', [원청과의] 직접 계약 등이 다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아쉽고요.”

인터뷰·정리 백선희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이란 압박을 강화하는 바이든

닉 클라크

미국과 미국의 호전적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 대선 결과를 이용해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각인시키려 한다.

지난 6월 18일 이란 대선에서 보수적인 판사 출신의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라이시의 유혈 탄압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이롭게 이용하려 한다.

라이시는 1988년 반정부 인사 수천명을 사형시킨 위원회에 참여한 판사였다. 그 희생자들 중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 정권을 공격한 인민무자헤딘뿐만 아니라 좌파 단체 회원들도 있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43~48퍼센트로, 1979년 이란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았다. 적어도 400만 명의 유권자가 승인된 후보들을 찍지 않고 무효표를 던졌다.

지배

이는 이란 권력층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보여 준다.

연이은 위기로 이란 통치자들은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잃어 왔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물가가 치솟았다. 서방의 제재가 이를 악화시켰지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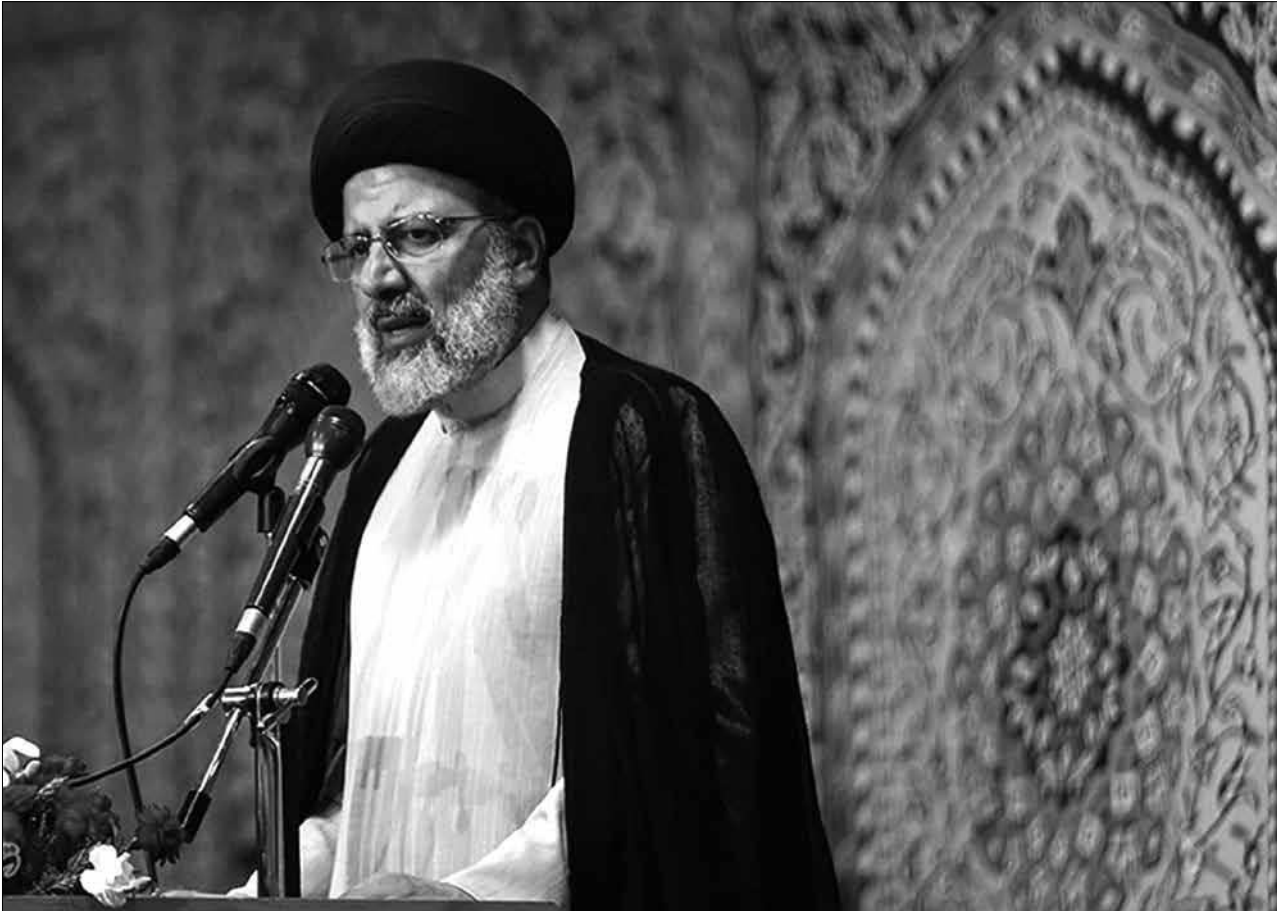


사진 출처: Mehrdad Modadi

신임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미국이 이란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비난하는 건 대미 강경파 라이시를 견제하려는 위선이다

란 정부의 부패, 긴축, 자유시장 개혁도 여기에 한몫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애를 먹었다. 2020년 초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고 이에 관해 거짓말을 해서 광범한 분노를 사기도 했다.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 물결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선거 결과를 두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란인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스라엘의 우익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이란을 “사형 집행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선출되지 않은 수호자위원회 성직자들의 승인을 거쳐야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이란의 선거 절차 때문에 이란인들이 진정한 선택권을 부정당했다고 이들은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은 위선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란 정권만큼이나 잔혹한 정권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란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인 독재 정권과도 그렇게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라이시를 문제 삼는 진정한 이유는 그가 이란 내 “강경파”이기 때문이다. 라이시는 전임자 하산 로하니와 같은 “개혁파”보다 서방과의 대화·협상에 더 반대한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핵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대(對)이란 제재를 끝내는 협정을 복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한다.

또한 미국은 중동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란에 맞선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평범한 이란인들의 편이 결코 아니다.

라이시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1800만 표를 얻었다. 2017년 대선에서 얻은 1600만표보다 많은 것이다. 여전히 많은 이란인들이 미국에 맞서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수십 년에 걸친 쿠데타와 독재,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평범한 이란인들은 알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크〉 2760호 / 번역 강미령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중소기업 청년 눈물 못 닦아 주는 정부 정책

옛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채공) 2년형 만기금을 수령했다. 만기 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나 만기금이 들어온 터라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다. 막상 통장에 찍힌 1600만 원과 2년치 이자 9만 원을 바라보니 눈물이 펄펄 나왔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역겨운 회사에서 2년을 꾸역꾸역 버텼구나.”

내채공은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이다. 기존에는 2년 근무 시 1600만 원, 3년 근무 시 3000만 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마저도 축소돼 2년을 채울 시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3년 형은 생기고 얼마 안 돼 사라졌다).

기존 2년형은 2년 동안 노동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총 1600만 원을 적립해서 2년을 만근한 노동자에게 만기금을 주는 방식이다.

즉, 실제로 노동자는 13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2년을 꼬박 채워야 한다.

만기 시 기업은 정부로부터 400만 원을 지원금 형식으로 돌려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자기 돈 쓰지 않으면서도 잦은 이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혜택 대상자는 분명 기업이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세상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조금만 버티면 1000만 원 이상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만기까지 버티 받는 목돈이 상당한 금액임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내채공은 임금 억제 효과를 낸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장이 “내채공 2년을 채워 돈 받으면 ‘실질 연봉’은 중견기업급 아니냐”며 낮은 임금을 정당화했다.

오죽하면 ‘노예계약’이라 부를까

게다가 이 정책은 청년들 사이에서 일명 ‘노예계약’으로 통한다. 회사에서 잦은 야근, 상사의 괴롭힘, 과도한 업무, 적성에 맞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며

라도 만기금을 위해 꼼짝없이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마치 엄청난 혜택을 베푸는 양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인질 삼아 더 많은 착취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버티다 못해 중도 퇴사하게 되면 청년 노동자는 스스로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지만 그동안 기업과 정부가 납입한 금액의 대부분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청년은 그동안 버틴 기간이 아까워서라도 만기를 채우고 얼마 뒤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채공 만기가 되어서 이를 뒤에 퇴사했다.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회사가 너무 좋아서 2년 즐겁게 회사를 다니면 목돈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더니!’ 하고 좋아했었다.

하지만 입사 후,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연판장을 작성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항의하고,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랬더니 사장들은 시발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내가 참여 당사자인 면담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지하철 몰카범’ 취급을 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공황장애와 방광염에 시달렸지만, 내채공 만기가 1년도 남지 않아 도저히 중간에 퇴사할 수가 없었다.

허울뿐인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내채공 2년을 겪은 뒤에 남은 것은 씁쓸함이었다. ‘평생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돈이라도 조금 벌려면 평생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에 내놓았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만 살펴봐도 정부의 정책에 마냥 기대서는 청년들의 삶이 절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 일 뿐”)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청년 정책을 내세우지만 내채공 정책의 실상이 그러하듯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손에 꼽힌다.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은 정당하다. 고통받고 있는 대부분 청년들은 노동자이거나 평범한 서민이다. 언제까지 ‘영끌’, ‘빚투’, ‘존버’라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2021년 4월 기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15~29세 잠재 취업가능·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퍼센트였다. 4명 중 1명이 실질적 실업상태이며,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난 속 무주택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청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튼튼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당연히 인상해야 한다. 왜 고통받는 청년들이 고통을 주는 사용자들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가.

나유정



6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이정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 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 저임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의 노동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20~30명이 담당하던 일이 전환 이후에는 10~15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농촌진흥청 공무직)

“[교대] 근무하고 초과근로까지 해서 한 달에 실수령액이 230만 원 남짓입니다. ...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임금은 동결 수준이고 올해 사측이 제안한 최종 임금인상안이 월 7500원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는 금액입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안 공무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한 미화 노동자는 공무직 전환 3년 만에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필수' 노동자라고 추켜세울뿐 정규직화도, 처우 개선도 외면해 왔다 2019년 7월에 열린 민주일반연맹 집회

고 말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심정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년째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직에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수준을 억제하는 것이다.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수준이

다른 경우, 당연히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 속에서 올해 임금 인상과 수당 차별 해소 등 처우 개선 예산 확충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 임금' 운운하며 추진해 온 직무급제 도입의 실체가 바로 저임금 정당화

이자 임금 억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위선적인 정부

정부의 '무늬만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부는 민간위탁 분야는 3단계 전환 논의 대상으로 멀찌감치 미뤄 놓고는 막상 논의 시기

가 되자 전환 여부를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며 외면해 버렸다.

일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외면 속에 기관들은 정부 평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런 책임 회피 속에서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에 고용된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등이 여전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

이런 민간위탁 노동자들 중에는 올해 제정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될 대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선적이게도 정부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추켜세우면서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열악한 처우는 내버려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자 정부 산하 기관들은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집단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환멸을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김은영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일부만을 맡아 위탁 운영하게 했다.

현재 시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 지자체에 설립됐고, 내년까지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사회서

비스원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의 질도 민간과 큰 차이가 없다.

자체 수익 구조로 운영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탓에, 타 지역 사회서비스원에 비해 조건이 나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조차 벌써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사측은 근무평정을 도입해 그 결과를 임금과 승진 등에 반영하려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채산제

민주당 개혁파인 이재명이 실질적 책임자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돼야만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54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최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신규

로 뽑는다며 기존의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은 해고하려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법안도 노동자들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존 민간업자들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신규 시설만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한다. 서비스 질 향상과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핵심 요건인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 책임이 없고, 공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도 빠져 있다. 정규직 채용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오히려 경영평가, 독립채산제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수익성 논리의 압박을 받기 쉽게 한다.

민간업자들과 우파들은 이윤이 침해당할까 봐 남인순 법안조차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조차 미뤄오다 최근 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내놔다.

첫째,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의 사회

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항을 없앴다. 신규 시설의 위탁 여부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넘겼다. 재량의 범위도 민간이 기피하거나 민간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로 한정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간 소속 노동자들과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처우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의 입장을 대변해 온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이 조항이 뜻깊은 조치라고 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회피하고 지자체들이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십상일 것이다.

수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애초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이다. 남인순 법안의 우선위탁 규정이 법안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하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 의견에도 위배된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민간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민간업자들과 우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이 수정안을 수용했다.

이런 후퇴에 반대에 민주당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민주당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부족한 법안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우파에 맞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남인순 법안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런 입장은 옳지 않다. 매우 미흡하고 문제점 있는 법이 일단 제정되면, 이를 개정하는 일은 더욱 만만찮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후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대한 우파들의 반발에 거둬 후퇴해 온 과정을 보면 말이다. 남인순 의원이 법안 후퇴를 수용한 것을 보면 정부나 민주당의 입장을 거스를 의지도 없다.

불황기에 공공사회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자본가와 우파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맞아야 한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